

學園의 民主化와 大學內의 葛藤 解消

金 東 一
(梨花女大 社會學科)

1. 社會의 民主化와 學園의 自律化

日帝 植民政治의 암흑기에서 벗어나 조국의 반조각을 잃어버린 채 남녘 땅에서라도 온 국민이 법 앞에 平等하고 自由롭게 살 수 있는 民主國家를 건설해 보자고 몸부림쳐 온 지 어언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우린 그동안 말로만 民主主義를 외쳤지 정치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한 채 傳統的 權威主義體制 속에서 살아 왔다. 어떻게 보면 케네디 대통령이 남겼던 말인 한 나라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실천 정도는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이 진리인지도 모른다.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제도적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행동으로는 비민주적이면서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까닭이 무엇일까? 두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면 그것은 말할 것 없이 民主主義라는 理念이 人類가 가장 오랫동안 집요하게 추구해 온 가장 고귀한 人間生活의 原理이자 價値이기 때문일 것이다. 自由와 平等, 이것보다 더 숭고하고 위대한 인간의 목표가 또 있을까?

그러나 自由와 平等이라는 개념은 극도로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 개념에 딱 들어 맞는 現實的 指標는 경험의 세계에서 찾기 힘든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自然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人間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 文明을 창조한 순간, 이미 自由와 平等이라는 상태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人間이 社會와 文化를 창조한다는 것은 자연의 세계에서 벗어나 人爲的으로 자신을 規制하는 틀을 만든다는 것이고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 세계에는 自律과 公平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을 뿐이다. 바로 이같은 개념적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韓國의 民主主義의 發展을 위해 우리가 해결할 첫번째 과제이다. 인간은 意味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意味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의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왜곡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위에서 제기한 첫번째 질문인 말로는 民主主義를 외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의 일부는 이제 밝혀진 셈이다. 즉 해방 이후 40년간 민주주의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民主主義의 意味에 대한 곡해, 곧 자유와 평등이라는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만 외쳤지 민주주의의 참된 원리인 自律性과 公平性을 생활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自律性과 公平性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는 특히 정치 분야에서 강하게 표출되어 왔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집권자들은 이같은 국민의 自律性과 公平性에 대한 욕구, 즉 民主化

에의 熱望을 억압함으로써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는 국민의 저력을 크게 소모시켜 왔다. 물론 정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교육 모든 부문에서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최근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다른 분야는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 분야에서, 그리고 대학에서의 自律性과 公平性에 대한 요구는 견잡을 수 없이 커져 왔다. 대학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학원 내부를 끊임없는 소모 속으로 몰아붙였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大學의 構成員들, 즉 교수·학생 그리고 학교 행정가나 재단 사이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大學의 非民主性과 權威主義는 교수·학생 집단 그리고 학교 당국 사이의 소외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왔다.

물론 학원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非民主性은 학원 밖의 政治體制와 文化와 직결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줄곧, 특히 維新 이후의 공권력에 의한 학원 탄압은 대학을 포함한 한국의 교육기관 전체를 고도로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버렸다. 필경 그동안 5·16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學園 內部的 葛藤은 학원 외부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와 학원 내부의 비민주성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이제는 學園 安定 뿐만 아니라 社會 全體의 安定과 發展을 위해 自律性과 公平性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 체제의 정비와 학원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2. 學園 民主化와 大學 發展

대학의 근본적인 기능은 학문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이다. 학문과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말할 것 없이 대학의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學問의 自由가 확보되지 못하고 教育의 自律性이 존재하지 않는 학원의 발전이란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학원이란 國家의 政治的 道具, 즉 體制 維持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엘리트를 만들어내거나 經濟 發展을 위한 機能的 人間間을 창출하려는 극히 폐쇄적인 전체주의 체제에서의 대학이 아니라 民主市民으로서의 모범적이고 지도자적인 교양과 자질

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필요한 個性에 맞는 機能과 力量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의 대학교육은 지난 20여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능인의 창출에만 전념해 왔고,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며 모두가 골고루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共同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民主主義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敎養人과 自由人의 생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은 빵만 가지고 살 수 없는 동물이다. 自由와 平等, 그리고 이것의 現實的 指標인 自律과 公平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체제에서는 거센 반항과 도전이 항상 존재하고 바로 이것은 그간의 한국 사회의 불안과 학원의 갈등에서 지속적으로 포출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學園의 安定과 發展의 첫째 요건은 학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대학이 그 본래의 기능인 學問과 教育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眞理를 진리라고 가르칠 수 없는 대학, 事實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학원에서 참된 학문과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自由와 平等의 理念에 터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서 교수가 존경받지 못하고 학교의 권위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그러나 한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이 반드시 大學 外的인 制約에 의해서만 침해 당해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政治體制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大學 內部的 여러 條件들도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大學 行政의 非民主性과 教育過程의 權威主義의이고 官僚主義의 人性向을 外的 條件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大學人은 스스로 자율성을 포기하고 敎權을 외부 세력에 넘겨 버린 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학 자체내 경영상의 부조리와 행정적 비리들을 세삼스레 들춰내지 않더라도 과거 세상에 폭로된 몇몇 私學 財團의 스캔들만으로도 우리가 알 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

이제 바깥 세계의 민주화는 政治人들과 國民들에게 맡기고 學園 內部的 民主化를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해야 할 때이다. 세컨대 최근에 많은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教授協議會나 評議會의 活性化는 학원의 민주화와 대학 발전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大學의 主人은 바로 教授集團이다. 학원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설립자 개인 또는 재단 이사들의 영달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教育機關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주인은 당연히 교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주인이어야 할 대다수의 교수가 학원의 관리와 운영에서 소외 당하고 소수의 행정가나 재단에서 학원 운영에 관한 모든 주요 결정을 독점할 때 대학이 침체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는 大學教授 개개인의 學問의 자유가 침해 당하기 쉽고 教育의 自律性과 效率性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中央集權의 이고 權威主義의인 行政組織에서는 학사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부패와 비리가 그늘진 곳에서 존재하기 쉽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원 행정은 정부의 감시와 규제를 엄격히 받아 왔고 이러한 외부의 간섭은 학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물론 교수들도 학원의 주인으로서 학사 업무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權威主義와 無事安逸主義에서 벗어나 학문의 깊이를 날로 더해가며 학구적 업적과 교육자로서의 소명 의식의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존경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식을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안일하게 지내는 교수나 고등학교 교사들의 열의에조차 못미치는 태도로 강의에 임하는 교수들을 학생들이 존경하고 따를 리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환멸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그것은 필경 大學과 教授의 權威를 실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自律의이고 公平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들의 관

계가 主從關係일 수는 없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관계일 수는 없다. 대학에 들어오면 일단 모든 학생은 성인으로 취급받아야 하고 교수나 다른 직원과 함께 同等한 人格體로 대접받아야 한다. 民法上的 未成年이라는 年齡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러 학생들을 어린 아이 취급하면서 그들 앞에 군림하려 든다. 많은 교수들이 家父長制의 權威主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들의 正當한 要求에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학원의 갈등을 자초한다. 학원과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학생들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 이같은 公平한 關係가 정립되지 않는 한 교수들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民主的으로 感化시키고 教育시킬 자질을 가진 교육자로 인정받기 힘들다.

이런 갈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그동안 학생들이 주장해 온 자신들의 自治活動에 대한 억압이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학생들이 과거 행동을 통해 非民主的인 方法으로 학교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려 할 때에는 과감히 학교 당국과 교수들은 이 문제의 해결에 동참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原則이니 規定이니 하는 것이 組織 構成員의 合議에 의해 형성되어야지 강요 당할 때 실효성이 없거나 필경 그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社會組織의 基本法則이다. 학생들은 대학 당국과 교직원들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집단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의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되어야 하고 부당한 요청은 대화를 통해 설득시키고 깨우쳐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民主主義의 大原則이며 대화와 타협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팅턴이 말한 대로 對話가 있는 곳에는 葛藤이 없고 改革이 있는 곳에는 革命이 없기 마련이다. 이제 학원의 민주화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화의 광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논의

할 단계에 온 것 같다. 앞에서 지적한 학원의 갈등 해소와 민주화를 위한 몇몇 요건들은 필경 對話와 妥協을 통해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학원의 민주화를 성취하는 데에는 制度的 裝置의 改善 내지 創出이 선결 요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의 운영과 실천을 위해서는 意識과 行動의 民主化가 뒤따라야 함을 고려할 때 대화의 폭을 넓히는 작업은 민주화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意識이란 바로 言語이며 언어의 주고 받음, 곧 대화 자체가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民主化의 意識을 생활화하는 작업은 바로 對話의 民主化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大學 公論의 活性化와 葛藤 解消

우리는 앞에서 학원의 안정과 발전의 기틀을 대학의 자율성, 즉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의 확보에서 찾아야 하고 이것은 곧 大學의 民主化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제 大學의 民主化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 볼 단계에 이르렀다. 傳統的인 社會科學 理論들에 따르면 民主化라는 과정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社會構造的 變化의 과정이고 또 하나는 意識 內容의 變化이다. 사회과학자들은 간혹 이 두 가지의 과정 중 어느 것이 먼저 와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에 빠져들곤 하는데 이에 대한 結論은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싱겁게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 보면 社會構造와 意識의 世界를 구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단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社會構造와 人間意識이 과연 별개의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대개의 사회과학자들은 아직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學園의 民主化라는 實踐的인 課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理論的 視覺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社會構造와 意識의 關係는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言語理論의 틀을 빌려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社會構造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言語構造이며 意識의 世界라는 것도 바로 言語의 世界이다. 인간이 창출한 모든 社會制度라는 것이 그 속성은 바로 人間意識, 곧 言語의 결정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조와 의식의 특성을 언어의 본질에서 찾고 이것들의 관계를 言語, 곧 意味의 關係로 규정할 때 학원의 민주화라는 것도 곧 언어 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고 인간 의식의 민주화라는 것도 언어와 그것에 의해 표현되는 意味의 再生産過程의 民主化를 의미한다.

사회 구조와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규정할 때 안정되고 발전하는 학원, 그리고 민주화된 대학 풍토, 즉 自律性과 公平性의 原則을 바탕으로 한 생기 있고 창조적인 교육 환경을 창출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식의 함양을 꾀하는 길은 意思疎通의 活性化와 言路의 民主化뿐이다. 言路가 활짝 개방되고 思想과 表現의 自由가 보장될 때 大學人은 자유롭게 진리 탐구에 정진할 수 있고 교수는 양심의 명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언론이 차단되고 의사 소통 구조가 왜곡될 때 박탈감과 불신감과 소외 의식이 만연하게 되고 이것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관계의 형성에 장애가 된다. 그동안 學園 內部的 이념적 혼란과 이데올로기의 과격화, 가치관의 전도와 규범의 불확실성,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반항과 도전, 학교 당국과 학생들간의 끊임없는 갈등, 이러한 침체되고 소외된 분위기 속에서 대학 생활에 대해 느껴지는 학생들의 회의와 환멸감, 이러한 것들은 필경 자유로운 意思疎通과 對話의 缺如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大學教育의 目標은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의 보급뿐만 아니라 건전한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주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교양인으로서 지녀야 할 의식과 생활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教育의 目標가 달성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大學 公論의 活性化를 통해 억압되고 왜곡된 의사 소통 구조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외침이나 이념

과 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은 權力으로부터 自由로와야 하며 이러한 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서만 학문과 교육의 발전 및 건전한 민주 시민의 의식 함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더러는 學問과 思想의 自由를 빙자하여 (혹은 확신하며) 대학의 안정과 사회의 발전에 눈을 끼칠 수 있는 敎條主義的이고 非民主的인 意識을 소유한 대학인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大學의 自律的인 公論의 전개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독소가 여과되어야 한다. 공개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 소통의 길이 막히면 소위 불건전한 의식과 사상은 地下로 숨어 든다. 우리는 최근에 각종 이념 씨름이나 운동권 학생들 중심의 지하 씨름이 어느 정도 번식해 왔고 또한 그것의 파괴적인 기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목격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창조적인 의식 구조의 개발이나 의식 개혁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시행되어 온 대학교육의 커리큘럼 중 국민윤리 교육이니 이데올로기 교육이니 하는 것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적어도 대학에서는 일방

적인 교화적 방식으로 건전한 의식의 함양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학원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갈등 해소의 방향은 충분히 제시되었다. 즉 그것은 자유로운 의사 소통 구조의 확립을 통해 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교류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러한 意味의 再生産過程을 통해 自律性과 公平性이 보장되는 사회 구조와 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전개된 학원 민주화에 대한 논의에서 敎授協議會나 評議會 또는 全體 敎授會議의 활성화를 통해 교수들의 의견이 학원 운영과 관리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든지 學生自治活動의 自由를 최대한 지원·보장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權力集中的인 學校行政體制를 지양하고, 학원 구조의 민주화를 통해 合理的이고 自律的이며 公平的인 의사 소통 구조를 확립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다. 다수의 교수가 학사 운영과 학원 경영에서 소외될 때 대학은 갈등과 분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 당할 때 교수와 학교의 권위는 도전받게 되며 그 결과 학원 소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미 무수히 체험한 바이다. *